

“日 보복에 소재부품 산업 육성 시급”

이낙연 총리 “이번 추경에 필요 예산 국회 요청 예정” “교육당국-노조 대화해 아이들 불편 다시 없어야 온열질환자 236명... 취약계층 안전에 만전 기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내외의 여건이 엄중해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순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구직자,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은 추경통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꼭 처리해주길 국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총과업을 끝내고 다시 교섭에 나선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교육 공무직) 노조와 교육 당국이 열린 자재로 대화해 타협을 이뤄줄 것도 촉구했다.
그는 “공무직 노조의 열악한 업무여건은 정부도 아프도록 잘 알고 있고, 교육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바탕 위에서 충실한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전날 총과업을 철저히 우정노조에 대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감사를 표하고, 우정사업본부에 노조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도 집배원 근무여건 향상과 우정사업본부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조의 농성·점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다”며 “그런 불법적인 방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자회사로 출범시켰고 전체 요금수납원의 78%가 이미 자회사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회사는 종전보다 임금을 평균 30% 인상하고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등 직원 처우를 개선했다. 앞으로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해 자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로공사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올해 온열질환자 기록이 역대 최고 때 기록을 넘어섰다고 폭염 취약계층 관리에 힘써줄 것을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236명”이라며 “역대 최고 더위를 기록했던 작년의 219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일찍 폭염대응체계를 갖췄고, 폭염대책도 마련했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독거노인, 취약계층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수시로 찾아보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 모레 사이에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 영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비탈면, 제방, 배수구, 공사장 등 호우 취약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뉴시스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 총리 “日 아베, 안보질서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대북제재와 연관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근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아베 총리가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서 질문을 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면서도 “지속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

도 있는 발언이라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했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양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회담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장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준비”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9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장기 대응을 모색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외교부에서 이런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일본 측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설

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외교적 협의와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요했다”고 반박했다.
청구권협정과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화롭게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찾기 위해서 결국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뉴시스

“추경 편성요건 안 맞지만 경제 위해 결정”

진영 행안장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목적이 경기 대응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김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추경 요건이 사실 엄격하다. 국가재정법상 우리(정부)가 현실적으로 하려는 추경하고는 조금 안 맞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예산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고용·산업 위기 대응지역과 강원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이 생겨나 이재민 등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추경을 결정할 것”이라며 “추경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안에 1011억원이 배정된 희망근로지원 사업은 필요불가결하다고 봤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고용·산업 위기대응지역 및 강원산불 지역의 실직자·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집행이 지연돼 주민 삶이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진 장관은 “희망근로지원 사업은 이

전에도 해왔던 것이고 지금은 지역에서 굉장히 원한다”며 “지역의 희망사항을 (정부가) 받아서 일자리를 제공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원 지역 이재민의 주거 지원이 적정하다는 질문을 받고서는 “정부로서는 한국전력공사 측 배상과는 상관없이 주거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지원을 일단락했다. 전파의 경우 많게는 1억3200만원이 지원하고 지자체 지원까지 합하면 과거에 비해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한전의 배상 문제가 결론날 때까지)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계속 살펴 보겠다”고 언급했다.
한전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KCRI)의 감정 결과에도 경찰 수사 발표가 더뎠다며 “국과수가 한전 변전소에서 발파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발파의 과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하기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또 포항 지진 이재민들의 애로가 여전하다는 의견에는 “포항시와 함께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착수”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 9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에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감세와 공무원 일자리 확대 기조에 맞서 “170만 공무원 중 30%인 50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또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며 공공부문 축소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그래야 우수한 청년들이 민간으로 진출하게 되고 경제가 선순환 하게 된다”며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교육을 내실화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

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확대에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감세와 공무원 축소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이 꼽힌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며 “세계적 투자자 집 로저스는 ‘10대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는 투자할 매력이 없다’고 했고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공무원 되는 것이 하버드 입학보다 어렵다’며 냉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17만 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 근속기준으로 연금까지 총 32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모두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다. 세금으로 성장 시키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경제난의 해법을 DI(김대중) 노믹스에서 찾아야 한다”며 “당시 DI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 감축이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